

# 신안군 ‘햇빛·바람연금’ 전국 모델 된다

재생에너지 사업 주민 몫 30% 할당 ‘에너지 기본소득’ 전국 주목

이 대통령 “담당 국장 똑똑해 데려다 써라” ...사업 전국 확대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신안군의 ‘햇빛 연금·바람 연금’의 전국 확산을 서두르라고 주문하면서 인구 3만 여명의 전남 서남권의 소도시가 전국의 벤치모델로 떠올랐다. <관련기사 3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사업자와 주민이 나누는 신안군 햇빛(바람)연금은 이 대통령이 정치 철학인 ‘기본소득’의 근간이 되는 ‘기본소득’과 궤를 같이 한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에도 유세장 곳곳에서 햇빛연금의 설계자인 박우량 전 신안군수를 거듭 언급하면서 햇빛연금을 높게 평가한 바 있는데, 이날 대통령 발언으로 신안 등 전남의 ‘에너지 기본소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신안군 내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려면 주민 몫으로 30%가량의 의무 할당하고 있지 않느냐”며 “아주 모범적 형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안군은 2018년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를 제정, 재생에너지 발전 법인 지분율의 30% 이상, 또는 총 사업비의 4% 이상에 주민의 참여 권리를 보장하거나 순이익의 30%를 보장하도록 명문화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전국의 군은 전부 인구소멸 위험지역인데 신안군은 햇빛 연금 때문에 인구가 몇 년째 늘고 있다”며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산

도를 빨리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나가다 우연히 인터뷰를 봤는데, 신안군의 담당 국장이 엄청 똑똑한 것 같다”며 “데려다 쓰든지 하는 것도 검토해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대통령이 언급한 인물은 신안군청 장희웅(52) 신재생에너지국장 직무대리로 추정된다. 그는 “햇빛연금이 태동한 2018년부터 업무를 담당했다. 언론에 이름이 언급된 적은 있으나 인터뷰는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남는 게 확실하지 않으나, 재생에너지는 부족하고 수입은 대체해야 하고, 공기와 햇빛은 무한하고, 동네에는 공용지부터 하다못해 도로, 공터, 하천, 논둑, 밭둑 등 노는 목은 땅이 엄청 많지 않느냐. 에너지 부족 사태가 곧 벌어질 텐데, 빨리 개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기본소득의 한 개념으로 햇빛 연금·바람 연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신안군의 모델을 전국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유세에서 “개인적으로 박우량 군수를 안다. 주민에게 편드를 만들어 수익을 줬다”며 “신안군은 (햇빛연금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새 정부는 이후 국정과제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확정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내년 초 출범 가시화

규약안 전남도의회 통과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 (이하 광역연합 규약안)이 뒤늦게 전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관련기사 5면>

전남도의회는 16일 제395회 전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전남도지사가 제출한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을 재적 재석 51명 중 찬성 4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했다.

광역연합 규약안이 전남도의회 동의의 얻은 건 규약안 제출 후 2달여 만으로, 규약안이 마지막 관문이었던 전남도의회 동의의 얻어내면서,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의 내년 초 출범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가 지난 10월 규약안을 의결했으나 도의회에서 농작 의결하면서 연초 출범에는 차질이 빚어진 상태다.

광역연합은 두 개 이상의 지자체가 교통, 관광, 경제 등 특정 분야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특수 목적의 지방자치단체다.

법적 지위를 갖는 광역연합이 출범하면 개별 지자체가 해결하기 힘든 광역 교통망 구축이나 대규모 국책 사업 유치 등에 공동 대응할 수 있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광역연합을 컨트론타워로 내세워 이른바 ‘5극3특’ 지방육성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5극3특’은 수도권에 대응해 5대 초광역권(메가시티)을 육성하고 강원·전북·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를 지원하는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종합계획이다.

이날 광역연합 규약안이 전남도의회를 통과하면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공식 출범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광역연합 출범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승인이 필요한데,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미 행안부와 사전 협의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의 승인 절차는 보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 승인이 이뤄지면, 광역연합에 각 시도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을 제정하고 사무실 개소와 연합의회 구성 등의 절차를 밟아나갈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인공태양 시설 유치 환영 16일 오후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나주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환영행사에서 신정훈 국회의원, 윤병태 나주시장,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 등이 유치를 축하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김진수 기자 jeans@

## 광주 군공항 이전 오늘 ‘6자 TF’ 서 마침표 찍나

대통령실·부처 장관급 총출동

최종 합의 도출 유력

‘이자 지원’ 등 난제 해법 기대

수십년간 담보 상태였던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17일 광주에서 열리는 ‘6자 협의체’ 회의에서 최종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회의에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국방부 장관 등 정부 핵심 인사가 참석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최종 합의’ 선언이 임박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광주시 등에 따르면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안규백 국방부 장관,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17일 군공항 이전을 위한 6자 협의체 회의가 열린다.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산 무안군수도 6자 협의체 당사자로 참여한다.

이날 국가 예산의 키를 쥔 기재부 장관과 군공항 이전의 주무 부처인 국방부 장관, 공항 건설을 담당하는 국토부 차관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것은 이미 물밑에서 상당 부분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실

무 협의나 의견 조율 단계라면 차관급이나 실무 국장급 선에서 논의가 오가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이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그동안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와 소음 피해를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특히 이전 부지로 거론된 무안군의 반대와 광주시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광주타운홀미팅에서 정부가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부터 급물살을 탔다.

6자 협의체 가동을 앞두고 각 기관은 핵심 쟁점에 대해 수차례 비공식 접촉을 갖고 이견을 좁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관건 중 하나였던 재원 조달 문제, 이른바 ‘이자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전향적인 입

장을 보인 것으로 관측된다.

광주시는 그동안 기부 대 양여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금융 비용 등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기재부 장관이 직접 참석한다는 점은 광주시가 제안했던 이자 문제 해결과 국비 지원 확대 등 재정적 쟁점들이 해소되었을 가능성을 높여준다.

국방부와 국토부 역시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책과 민간공항 동시 이전 등 굵직한 현안들에 대해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도심 발전의 저해 요소였던 공항 부지를 미래 성장 동력의 거점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되며, 전남도는 서남권 거점 공항 육성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6월 추락사 미온 대처 안전불감증 키웠다 ▶6면

광주일보 독자위원회 ▶11면

미지근한 KIA 스토브리그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다시 윤빛 도는 피부

설화수 윤조에센스

Sulwhasoo

